

## 分斷解消를 위한 經濟教育

張 和 洙

(中央大 貿易學科)

## 1. 몰타會談과 冷戰종식의 교훈

이 글의 論題와 같은 독특한 취지를 囿繞하고 먼저 우리가 看過할 수 없는 사실은 최근과 같이 급변하는 世界的인 政治經濟 秩序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오랜 民族分斷의 특수 상황에 대처하여 分斷克服을 위한 大學의 현실적 經濟教育이 어느 만큼의 事實認識의 기초 위에서 실효성 있는 方法論에 입각하여 研究되고 教授되며, 어느 만큼의 참된 價値判斷이나 뚜렷한 立場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겠는가 하는 問題意識을 신중하게 檢討해 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이번에 몰타會談(1989. 12. 2)이 극적으로 물고 오는 美·蘇 首腦에 의한 冷戰體制의 종식은 어쩌면 우리 韓半島 分斷에 대해서 가장 확고한 해결의 서광이 아닐 수 없을 뿐더러 일찌기 알타秘密會談 이래로 실로 45년만에 새로운 국제 협약에 의한 興件 造成이요, 世界 政治經濟의 新秩序 속에 수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韓半島 문제가 제 2차 세계 대전의 종결과 더불어 처음에 영문도 모를 分斷과 美·蘇 占領地域으로 설정된 때부터 국제적으로도 관심 밖의 하잘것 없는 존재이었을 뿐이었다. 그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끊고 맺는 확실한 繼起的 移行過程이 없이 分斷 解消의 실마리를 찾는 결정적 契機조차 주어질 수가 없었다.

이제 베를린障壁(1989. 11. 10)의 충격적인 칼거는 세계의 이복이 집중되는 東·西獨의 완전한 개방과 독일의 統一과 유럽의 新秩序뿐만이 아니라 곧바로 極東에 보잘것 없이 자리잡은 듯한 韓半島 문제에 나름대로의 독특한 分斷解消의 분위기가 충분히 성숙될 수 있을 것으로 믿게 된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韓半島의 分斷은 獨逸의 分割占領과 비교해 볼 때 항상 類型에 있어서는 때를 같이 해서 변하여 왔지만, 국제적으로 注目되는 位相이나 本質的인 性格이 전혀 다른 특수한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이 상기되어야 한다.

韓半島의 分斷占領이 북위 38 선을 중심으로 美·蘇 兩軍政의 占領軍地域으로 시작된 1945년 8월 15일에 日本이 무조건 항복한 이후 어떠한 국제법적인 根據에서 韓半島가 分斷되었는지, 누가 38 선을 그었는지 지금껏 文獻 한장없이 아무도 아는 이가 없다. 獨逸의 경우는 이미 나찌스 독일이 패당하기 1년 전에 '美合參本部'의 指令(JCS 1067)에 의해서 모든 作業이 각본대로 진행되었다. 특히 무서운 獨逸의 再起에 의해서 두번의 세계 대전을 겪은 모든 強大國들은 강그리 戰爭潛在力(war potential)을 괴멸시키는 목표에 주력하였다. 이 때문에 中央政府가 없이 美·英·佛·蘇 4개국에 의한 分割占領과 철저한 政經分離에 의해서 각 占領地域間에

經濟交流(이를 地域間 貿易, interzonal trade 라고 함)만을 산발적으로 허용한 것이 오늘의 東·西獨 經濟交流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政治面에서는 이번의 ‘몰타共同宣言’과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改革)·그라스노스트(開放) 정책에 의해서 東歐 共產國들이 人民民主主義를 종래의 스탈린式 一國社會主義나 프롤레타리아獨裁로부터 탈피해서 드디어 베를린障壁이 허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국경선이나 獨逸의 再統一을 반대하는 強大國들의 利害關係는 전혀 본질 면에서 바꾸어지지 않고 있을 뿐이다.

韓半島의 分斷은 처음부터 強大國들의 利害關係가 얽힐 것도 없었고 國際協約의 명시적인 대상조차 될 수 없었으며, 지금까지 38分界線에 대한 아무런 根據 資料 하나 없이 오랜 동안 민족 상잔의 戰爭과 政治的 對決은 말할 나위도 없고 등·서독보다도 자연스러워야 될 經濟交流(이것은 南北交易이라고도 부름)조차 지속되지 못한 채로 새로운 轉換期에 접어든 것 같다.

이번의 몰타會談(미·소 수뇌 회담)은 전 세계 질서의 재편성과 더불어 우리 韓半島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共同宣言’의 핵심을 대충 간추려 볼 때 첫째로 冷戰의 閉幕과 美·蘇 新時代의 開幕, 둘째로 다음 회담에서 戰略武器 삭감 조약의 조인을 목표로, 셋째로 유럽 平時戰爭力의 삭감을 합의하고 1990년말까지 단행, 넷째로 東歐 및 獨逸 問題의 民族自治와 제 2차 대전 후의 國境線을 존중함, 다섯째로 미국은 蘇聯과 東歐의 改革을 지지하는 것 등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韓半島의 分斷解消에 世界情勢가 결정적으로 새로운 轉機를 마련해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첫째로 ‘冷戰時代의 終末’이 38선의 비극을 풀어줄 수 있겠고 美·蘇의 새시대 선언이 그동안 고질적으로 응고된 南北韓의 關係改善에 정치·경제·군사 및 物的·人的 交流를 통해서 기여하고 신뢰 구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韓半島 문제는 당초부터 강대국들의 경계심과 국제법적인 별다른 制約이 없었다. 반면에 獨逸 문제는 民族自治와 동시에 현 國境線도 그대로 현상 유지시키

는 原則에 미·소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지만, 韓半島는 경계심을 풀면서 民族自治가 존중되어야 하고 38선 아닌 현재의 休戰線은 政治協定이나 군사 회담 및 경제 교류를 통해서 쉽사리 풀릴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北韓의 경우 미국이 소련의 改革·開放政策을 지지한다고 합의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自力更生과 主體思想 그리고 프롤레타리아獨裁와 스탈린式 一國社會主義를 벗기 어려운 金日成體制의 硬直性에 대한 소련의 강력한 페레스트로이카壓력과 미국의 고차적인 誘因力이 北韓의 變化를 촉진시키는 물론 南北韓 關係의 급속한 개선을 물고 올 것으로 기대된다.

## 2. 分斷解消를 위한 政治經濟學的 接近

우리나라의 分斷 現實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日常生活에 커다란 制約을 가하고 끊임없이 국제 정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分斷狀況은 무엇보다도 민족의 최대 비극이고 나라 發展에 최악의 장애 요인이며 이 나라 知性人들에게는 이데올로기의 갈등 때문에 자유롭게 처신하기가 매우 힘든 걸림돌이 되어 왔다.

世界史的인 측면에 비추어 본 현 단계는 일찌기 冷戰(cold war)의 所産으로 등장한 韓半島의 分斷狀況에서 史上初有의 이데올로기와 體制 실험의 중요한 現狀이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으며, 우리는 반세기를 바로 그 現場에 살면서 이 어려운 難題를 克服해야 할 使命을 안고 있는 셈이다.

최근에 南北韓의 당사자 사이에는 統一을 향한 노력의 일환으로 關係 正常化나 신뢰 구축을 위한 일련의 회담들, 예컨대 赤十字 회담, 體育 회담, 經濟 회담 및 國會 회담 등의 南北對話(north-south dialogue)가 있어 왔다. 1972년에는 ‘7·4 南北共同聲明’까지 이미 있었다(獨逸은 이때 兩獨國家 시대로 정착됨).

또한 經濟交流만 해도 일찌기 解放 직후에 갑자기 民族共同體가 갈라지고 單一經濟圈이 분해되면서 이른바 비공식적인 ‘38 貿易’이나 공식적인 ‘地域間 貿易’ 또는 ‘南北交易’이란 명칭으로 6·25 韓國戰爭이 나기 한 해 전 1949년 4

월 3일에 '停止' 되기까지 상당량의 交易 實績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때 이래 오늘날까지 再開의 기회를 엿보기만 하고 있지 않은가(註: 筆者著, 「分斷國의 經濟交流」, 1989를 參照).

동·서독의 경우는 4개 占領地域 사이에서 처음에 州 單位로 시작한 '貿易프로그램'이 곧이어 '地域間 貿易'으로 계속 확대·발전해 나아가게 되었고, 1950년에는 '베를린協定'에 의해서 獨逸內 貿易(Innerdeutscherhandel)을 지금까지 半永久的으로 이어오는 經濟交流가 準國際法的으로 보장되고 오늘날에는 쌍방간에 연간 약 100억 달러에 달하는 交易規模를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1972년에는 이미 '1民族 2國家'의 이른바 基本條約(basic treaty)을 맺고 西獨의 끊임없는 經濟援助(예로 Swing과 같은 清算計定上의 殘高 및 中·長期 援助 供與 등)에 의해서 東獨의 호의적인 반응을 유지해 오다가 이번에 역사적인 '베를린障壁'의 철거로써 독일의 再統一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東獨社會主義統一黨(共產黨)은 새로운 指導部를 구성하고 '기지'書記長을 내세워 또 하나의 民主主義의 社會主義를 실현하겠다고 하면서도 쉽사리 東獨의 解體나 再統一을 서두르지는 않고 있다. 이를 가리켜 '스탈린主義의 社會主義와 現代獨占資本主義를 초월하는 제3의 길(모텔)'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南北韓의 경우에는 서로가 경직된 상태 속에 아직도 다분히 탐색전을 벌이고 있는 매우 宣傳的 姿勢 속에서, 南은 무엇보다도 經濟交流를 위주로 제반의 교류를 추진하면서 점차 民族共同體 統一方案으로 國家聯合을 내다보는 데 비해서, 北은 처음부터 政治會談을 통해서 休戰協定에 가름하는 平和協定의 체결과 軍事會談을 통해서 軍備縮小로 밀고 나아가서 군사 경제에 투자되어 온 막대한 可用資源을 우선 뒤떨어진 經濟開發에 돌려 쓰는 동시에 결국 高麗聯邦制統一方案, 즉 聯合國家로 원·코리아를 서두르고 있다. 여기에 南韓으로부터 필연적으로 不信과 경계심 또는 피해 의식까지 겸친 拒否反應이 나올 것은 당연하다. 이같은 사실들이 올바르게 兩側 국민들에게 理解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더구나 大學에서 이같은 狀況에 관해서

어떻게 敎育을 하여야 서로의 立場을 고려하도록 만들고, 항상 事實認識의 基礎 위에서 올바른 상황 파악을 하게 하며, 참된 民族自尊의 복지 사회와 歷史變革의 價値性을 구현할 수 있게 할지가 매우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필자는 그동안 大學에서 '社會主義經濟·貿易'론을 십수년간 '特講'으로 강의해 왔고, 특히 南·北韓의 經濟交流 문제를 같은 分斷國인 동·서독과 비교·검토하면서 學問으로서 歷史性과 이데올로기性 및 批判性을 충분히 가미하면서 社會主義에 관해서는 짧은 지식밖에 갖지 못하면서도 社會科學을 전공하고 있는 學生들에게 올바른 기초 지식과 南北韓 및 공산권과 자본주의권의 배경 지식 그리고 실제로 소련, 중국 및 북한의 開放에 대응하는 貿易方式을 어떻게 갖추어야 할 것인지를 가르친 바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敎育적 效果나 커리큘럼상의 必須性은 뒤에 상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分斷狀況을 論하는 經濟敎育'은 절대적으로 政治經濟學(political economy)을 모르고는 아무런 效果나 價値性도 없고 또한 理解도 될 수 없다는 점이다.

政治經濟學은 단순히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순수 경제학 또는 計量分析 이전에 規範科學的 接近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며, 자본주의의 運動法則이 불완전하지만, 私有財產이 전혀 없는 社會主義經濟의 計劃經濟(고스플랜, 계획 가격, 계획 무역 등)를 파악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우리의 分斷狀況에서는 한마디로 '分斷克服'인지 아니면 '分斷解消'인지 뜻이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이 글의 처음 意圖가 어디에 있는지 다소 吟味하게끔 만드는 概念이 되겠지만, 筆者는 어디까지나 統一을 향한 單一經濟圈의 구성과 經濟共同體를 전제로 삼고 이를 위한 經濟敎育으로 생각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分斷解消'란 용어가 敎育상 더욱 적절할 뿐더러 무엇보다도 원래 단일 민족이 지닌 '原狀回復'이라는 목표하에 冷戰의 소산으로부터 冷戰終熄에 따라 자연히 서로 對峙하던 이데올로기, 體制, 經濟管理方式이 점차 原狀으로 回歸하는 방향으로 정당하게 합쳐되는 뜻이 될 것 같다. 반면 '分

斷克服'이란 지금까지 冷戰과 對決論理 속에 고정 관념으로 작용된 두 가지 意味가 동시에 내포되는 것같은데, 하나는 상대를 언제까지나 敵으로 규정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制壓하고 이겨내야 된다는 대결과 경쟁의 敵對感이 부지불식간에 나타나 있다고 보겠다. 다른 하나는 '分斷克服'이라는 의미가 그런대로 現狀 固定化 속에서 '두개의 한국'을 그대로 놓아둔 채 언제까지나 견디어 가보자는 다분히 現狀變化를 싫어하거나 자칫하다가는 自信을 잃은 용어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결국 올바른 방향에서 말한다면 '分斷解消'를 목표로 삼는 것이 마땅하며 이를 위해서는 '政治經濟學'에 의한 접근이 經濟敎育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分斷 이후 오랜 동안 大學敎育을 비롯한 모든 部門에서 이른바 滅共만이 至上命題로 뿌리깊게 작용해 온 우리 現實에서 이제 平和的인 共存과 상호 신뢰 구축 및 理解를 위한 접근은 筆者가 經驗을 통해 느낀 '政治經濟學'의 필요성이 되고도 남는다.

### 3. 分斷論理 속의 經濟敎育方法論

#### 1) 나를 알고 狀況把握에 임하고

우리나라는 일찌기 영문도 모를 國土分斷에 의해서 民族共同體가 참담한 悲劇을 겪어야만 했고, 제 2차 세계 대전 후 冷戰體制 속에서 무서운 이데올로기의 갈등에 의하여 人間의 존엄성과 自由라는 基本權과 民族社會의 협동 정신이나 공동 권익 및 學問의 自由까지 치참하게 짓밟혀 왔다. 마치 「25時」처럼 善惡判斷이나 價値判斷을 느낄 틈조차 없이 개개인 간의 영혼 소외와 實存意識조차 잊어버린 기계처럼 강요당한 채로 노예와 같이 살아 왔다.

이는 이 나라에 인간다운 敎育의 不在는 말할 나위도 없고 인간·사회·문화·종교·정치 의 왜곡과 통일 의 저해 그리고 非民主的 經濟運用만이 단순 재 생산을 거듭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의 分斷과 冷戰 구조는 극단의 對決 자세와 體制 우위를 강요하는 허구적 敎理와 선전적 思考를 강요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써 價値判斷이나 思想과 良心의 자유

및 참된 眞理를 추구하는 學問 研究와 敎育은 이데올로기에 從屬되고 學問의 宗派性이 오직 唯一 體制論理로 分斷된 양측에서 다같이 매카시즘적인 소동을 피울 수밖에 없게 만들었을 뿐이다.

中世 암흑 시대에는 스콜라 哲學의 唯一性에 의해 異端을 무자비한 宗教裁判으로 탄압해 왔지만, "지구는 둥글고 돈다"는 갈릴레오의 참된 眞理 앞에 모든 權威는 힘없이 무너지고 中世는 필연적으로 近世로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存在한다"라는 데카르트의 合理主義와 '人間不平等起源論' 및 '自然으로 돌아가자'는 루소 등이 주창한 啓蒙思想, 自然法思想 및 社會契約說은 급기야 무서운 歷史發展의 기동력으로 市民革命과 資本主義의 엄청난 生産力을 조성하고 社會變革의 기조로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앞에서도 간략하게 狀況把握을 위하여 몰타會談의 교환에 따른 冷戰 종식의 再認識과 오랜 동안 감정적인 反共偏向에 의해서 南韓의 경제력 優位(그것도 對外依存度가 너무 높아 自立度는 30% 미만이고, 1차 金屬을 비롯한 生産手段 부문과 基礎科學技術은 중속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나 허울 좋은 自由民主가 전유물처럼 강조되어 왔을 뿐, 대학교육에서 人文社會科學의 인식조차 北韓에 관한 한 정확한 實相을 파악한다거나 資料를 입수하거나 南韓 經濟의 본질적 구조 및 운동 법칙이나 對外依存的인 國際關係를 연구할 만한 분위기가 별로 활발하게 전개된 바 없었다.

어느 時代에 있어서나 大學이 불완전한 現實을 떠나 보다 완전한 理想을 추구하면서 眞理를 탐구하고, 科學性을 존중하면서 아무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객관적으로 추구할 수 있을 때 歷史發展에 기여할 수 있다. 學問이 자유로운 批判性과 어느 것으로도 분석이 가능한 比較機能 그리고 인간 사회가 삶을 영위하는 歷史性을 결여하면서까지 大學의 學問을 '크게 배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최근년에 급속히 변화되는 南韓의 國際化와 經濟力 伸張 그리고 진보적인 의미에서 歷史를 되돌리지 않는 自由와 民主의 새로운 認識, 이런 것들은 비록 아직도 우리 社會에 고답적인 守舊

勢力과 既得權層들이 기존 관념에 溫存하려는 역센 관성이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自覺意識, 특히 共產圈의 개혁·개방 정책에 따른 세계적 新秩序의 도래에 자극 받아서 활발한 自我發見의 몸부림과 社會運動의 位相 定立이 여러 가지로 모색되고 있다. 그 중에는 너무 성급하거나 過激한 또는 急進暴力이 없지도 않으나, 그것이 적어도 民族을 스스로 自滅시키고 國家存立을 위태롭게 하거나 社會安全을 해칠 정도로 南韓을 허약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다. 그것은 오히려 變역성과 進退과 民主적 要求의 과정에서 경직된 北韓社會를 開化시키기 위한 요인이 되고, 南韓社會에 대해서는 제동 장치 또는 긍정적인 면에서 自淨 능력이 될 수 있는 活力이 아닌가 싶다.

北韓은 自力更生과 主體思想, 一國社會主義와 프롤레타리아獨裁로 인하여 社會는 硬直性和 落後性을 면치 못하고 경제는 能率과 收益性을 잃은 채로 침몰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 그네들은 南韓이 국제 관계가 활발하고 經濟力이 優位라 해도 자본주의의 不均等 發展과 세계적 달러 暴落의 위기로 인하여 무서운 恐慌에 언젠가는 빠져들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필연적인 어떤 矛盾의 폭발을 노리고 있다. 물론 이같은 취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때문에 自體討論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兩側을 다 같이 理解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經濟 문제를 면밀히 分析해 볼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결국 자본주의의 본질적 운동 법칙이나 사회주의 계획 경제—그것도 市場메카니즘을 전적으로 否定하고 私有財產을 없애 버린 토대 위의 北韓의 經濟原理—의 동시 이해를 위해서는 政治經濟學理論이 그것에 대한 비전과 분석 용구가 될 뿐이다.

## 2) 人間 중심의 社會와 效率 경쟁

오즈음 급변하는 共產圈의 동향, 특히 젊음과 지성을 겸비한 소련 共產黨 書記長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페레스트로이카와 그라스노스트 등 일련의 정책으로 東歐 共產圈이 한꺼번에 變革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다. 그러면서도 硬사리 資本主義의 體制나 市場經濟로 전환하는 것도 아니며 自由陣營으로 대거 移住해 가지도 않는다.

일찌기 1965년의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틴버겐 教授가 ‘體制는 收斂(convergency)하는가’로 論爭을 불티 일으킨 이래, 또한 소련에서는 스탈린 死後 1958년에 利潤制와 賃與金 및 獨立採算制와 經濟管理를 내세운 리벨만理論이 나온 뒤를 이어 1962년에 정식으로 社會主義經濟相互援助會議(COMECON)에서 사회주의 경제·무역의 效率性(efficiency)과 收益性(rentability)의 문제가 체코의 니크린, 체르니안스키 등에 의해서 제기된 바 있다. 이같은 경제 개혁의 몸부림으로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外資 導入이나 西歐에의 開放을 통해서 탈출해 보려고 시도하였는데, 대표적인 成功 事例은 중국에서 1979년 이래 10년 동안에 눈부시게 이룩한 合辦法이나 經濟特區를 통한 新興社會主義國(NSICs)의 성취로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登小平이 내세운 中國의 實用主義와 現代化 計劃은 자본주의의 資本과 技術導入으로 인민들에게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고 급속히 高度成長을 이루어가고 있었으나, 天安門 流血事態가 빚어낸 상황처럼 資本主義의 물질적·정치적 自由意識이 밀물처럼 유입되고 한편 黨 幹部와 친척들의 부패와 부정 등 사회 병리 현상에 대해 政治改革을 요구하기에 이르게 되자 이것을 피를 흘리며 압살시켜 버렸다. 여기에 中國 開放의 자가당착이 있다.

갑자기 등장한 고르바초프는 1989년을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共產主義 變革의 시대로 점칠 지우면서 지난 해 헬싱키 演說(10월 26일)에서 “새로운 時代로의 移行은 平和스런 시대라는 여러 分野에서 地球的 規模로 人權을 확보하고 守護한다는 점에 國家 및 人民들이 서로 和合함을 말한다”라고 설파한 바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人間中心의 또는 ‘사람 본위’의 사회주의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더 나아가서 自由主義社會 속에도 파고 들어가서 開放 속에 能率 경쟁을 치루겠다는 일대 모험이 아닐 수 없으며, 대단한 自信感과 역사적 當爲性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는 中國이 미처 넘보지 못할 蘇聯 고르바초프의 破格이며, 美國을 비롯한 資本主義圈 및 多國籍 世界獨占資本이 미처 예견하지 못한 逆襲으로 받아들여야 할 일이다.

여기서 지적하는 逆襲이란 일찌기 제2차 대전 후 美國 中心의 소위 팍스·아메리카나(Pax Americana)가 종래 英國 중심의 팍스·브리타니카(Pax Britanica)로부터 世界 經濟秩序를 주도적으로 휘어잡은 뒤에 세계주의(globalism)를 앞세워 EC 등 地域主義(regionalism)나 社會主義的 民族主義(nationalism)까지도 제압하면서 IMF(국제통화기금)와 GATT(관세·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를 두개의 기둥으로 삼고 세계 경제와 자본주의의 市場圈을 장악하였다가 1971년 닉슨 독트린으로 美國의 金단리는 국제 통화로부터 종이 돈, 즉 不換紙幣로 전락되고 石油波動 이후 세계적 ‘인플레이션’으로 오일·머니를 還收한 뒤에 1982년 이후 본격적으로 ‘레이거노믹스’에 의한 對蘇 包圍網 構築에 몰리게 되자, 이제 거꾸로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人間 中心 社會’로 바꾸어 놓는 역습이란 뜻이다. 이것은 물론 軍縮과 冷戰解消가 전제된다.

北韓의 경우 아우타르키(自力更生) 정책에 지켜서 資本 고갈, 즉 국민 자본 잠식으로 곤궁에 처하게 되자, 1984년에 金日成은 蘇聯과 東歐 그리고 中國까지 20년만의 나들이를 하였지만, 아무런 援助나 經濟協力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상황만을 확인한 채로 돌아온 뒤 美國에 대한 6·25 당시 이래의 經濟封鎖(예로서 COCOM 품목)를 풀기 위한 米蘇外交와 南韓에 대한 ‘多面的인 諸般交流’를 위시로 ‘平和協定’이나 ‘軍備縮小’를 들고 나오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蘇聯이 美國에게서 당한 것과 똑같은 包圍, 즉 경제 封鎖 속에서 北韓이 당하는 곤욕으로 인식한다면 맞아 떨어지는 결과라고 하겠다.

참고로 1980년대초부터 레이거노믹스가 취한 對蘇 包圍의 내용은 첫째로 同時多發 核戰爭, 둘째로 無限軍備競爭, 셋째로 尖端技術 및 戰略品目 등 輸出封鎖 등인 바, 이는 결국 소련과 공산권 및 北韓을 굴복시키기에 이르렀고 이것의 탈출구로서 고르바초프의 逆襲은 테레스트로이카와 人間 중심 社會主義이다.

결국 우리나라 分斷解消을 위한 經濟敎育은 人間 중심 능력 본위의 政治經濟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 4. 自由民主와 人間福祉의 참된 社會

북한의 硬直性은 오히려 통일을 오래 끌고 分斷을 획일적으로 평가하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南韓의 그칠 줄 모르는 警戒와 不信을 조장하게 되었다. 名分은 항상 科學的 社會주의의 創造性이나 主體思想에 두고 統一에는 원·코리아, 즉 高麗聯邦制나 軍備縮小에 의한 경제 개발에 資源配分의 전환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唯一體制나 경제 개방이나 改革에 절대적 걸림돌이 되는 이론나 主體思想 그리고 武力革命的 기초로 생각하는 生産手段의 全人民的 所有와 自力更生 등은 항상 南韓과의 異質性을 더욱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民族共同體를 함의할 수 있는 同調勢力이나 국제적 輿論의 지지 기반마저도 잃어 버리는 결과까지 자초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문제점, 특히 北韓의 特殊 狀況을 본질적으로 類推할 수 있는 方法論이 무엇인가 말한다면 역시 일반적인 社會主義 政治經濟學 原理를 터득하고 이를 北韓 經濟 및 정치·사회에 적용해 볼 수밖에 없게 된다.

北韓의 全琴哲(조국평화통일부위원장)은 최근 南北 國會會談 豫備會談(1989.11.26)에서 말하기를 “단순하게 開放이 좋다고 하는 것은 模倣에 비롯된 事大主義者의 생각일 뿐이다. 主體를 확립하고 있는 우리(北韓을 지칭함)에게 그같은 開放을 기대하는 것은 언어 도단의 妄想일 뿐이다”라고 단언하고 있다. 이로써 北韓이 그토록 共產圈에 혼한 開放과 改革을 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현실인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改革과 開放을 하고픈 여건이나 생각도 없다는 사실을 쉽사리 파악할 수 있다.

물론 北韓이 완전하지 못한 점이 많을수록 취약점은 모순으로 언제든지 폭발이 될 것이며, 그 나름대로 체제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갖추었거나 그 나름의 상당한 正當性이나 支持度를 유지한다면 폭발은 적게 점진적인 改善으로 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北韓은 1984년에 이미 ‘合營法’을 공포하고 開放을 하였으나, 아직껏 부진하고 中國의 화교 자본을 흉내낸 日本의 朝總聯 資本도 약

간의 백화점과 병원, 호텔, 서어비스 업종에서 그치고 말았다. 西方 자본과 기술 도입 역시 별로 대단치 못하다. 프랑스 합작의 100층이 넘는 쌍둥이 건물의 건축이 고작이다.

그렇다면 分斷克服을 위한 大學에서의 經濟教育을 실현시키는 데 이상과 같은 狀況把握을 근거로 北韓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겠고, 南韓의 정치경제학적 資本의 성격이 投機的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을 유발해서 貧富階層의 위화감이 크든지 아니면 株價나 地價나를 가지고 國際化 속에 경제 발전이 換率 適正化 政策으로 貿易黑字를 끌어오면 된다는지 하는 것을 파악함으로써 상호 취약점을 알고 비교·분석하며 補充과 協助를 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물론 이같은 어프로치가 그것만이 절대적이거나 本質을 명백히 알고 치밀하게 分析되었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오늘의 新古典派의 經濟學方法論이 지닌 數理的 分析이나 또는 微視經濟學과 전혀 성격이 다른 巨視經濟學을 합해서 價格分析과 所得分析을 합하면 ‘總合’이 된다는 식의 方法論으로 北韓이나 共產圈에 대한 經濟教育을 실현시킬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구태여 方法論을 따진다면 우리 식 관점에 비추어 볼 때 ‘what to be(事實)’를 구명하는 현실적 커리큘럼에다가 상당한 정도 앞으로 ‘what ought to be(當爲性)’를 도입해서 實證經濟學 위에 規範科學(normative)을 더 많이 교육하고 現狀 分析에 적용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歷史性이 따르기 마련이고 共同體 意識이나 單一經濟圈의 상호 補充原理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때로는 일방적인 經濟援助나 特權을 제공하면서 北韓을 유화시키고 스스로 국제 여론에서 고립되거나 자체 경제 모순으로 分解되도록 만드는 일도 가능하다. 이는 일찍부터 東·西獨의 經濟交流에서 西獨이 오랜 동안 취해 온 援助·特權이며, 이유는 經濟力의 誘因으로 통일을 위해서 또한 東獨 속에 孤島와 같이 길 막힌 채로 갇혀 있는 西베를린의 通路를 확보하는 데 이용하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번에 베를린障壁을 완전히 철거하고 제3의 統一方案을 모색하도록 기여한 셈이다.

韓半島의 分斷은 처음부터 식민지에서 벗어난

南北韓을 일찌기 영문도 모르게 美·蘇 兩軍이 占領하면서 冷戰論理 속에 영구적으로 지금껏 固定化시킨 셈이며, 單一 民主獨立國家를 수립한다고 모스크바 3相 會談(1945.12.26)이나 美·蘇共同委員會(1946.1.17~1947.10)에서 승낙한 바 있고, 우편·통신·방송·여행 및 物資交易 등을 당연히 교류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나, 정치적인 면에서는 ‘民主’란 용어 해석이 양측에서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결국 그나마 經濟交流까지 강그리 斷切되고 戰爭만 치루게 되었다. 동·서독과는 달리 여건이 좋아서 政經一致로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經濟交流까지도 놓치는 결과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현실적으로 당면한 ‘分斷狀況에서의 經濟教育’이 너무 政治적으로 치중되어 敵對感만 증만하고 대결 論理로 끌여가서는 해결될 수 없다. 그렇다고 너무 經濟적으로 補充 관계나 交易條件 또는 分業體制나 貨務方式에 치중한다거나 무역 利益을 따져서는 상호 해결될 수도 없다. 가급적 北韓을 이해하고 소화시키면서 우리의 현실도 적용시키려면 政治經濟學的인 어프로치가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바탕으로 互惠·平等의 交易과 人間 중심의 社會原理를 조화시키는 한편 새 시대를 열면서 새로운 世界 經濟秩序를 확립하는 길이 韓半島의 分斷狀況에 대처하는 길이라고 믿고 싶다.

끝으로 고르바초프는 지난 해 프라우다紙에 게재한 論文(1989.11.26)을 통해서 資本主義體制의 長點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즉 “맑스는 資本主義가 지닌 自己發展의 가능성을 過小評價했다고 말할 수 있다. 맑스는 未來의 科學技術革命이 資本主義 發展의 새로운 源泉임을 豫見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尖端科學技術의 개발은 사회주의보다도 결국 자본주의에게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이는 무한한 利潤追求와 資金·動員投資 때문인 바 이같은 動機 부여는 분명히 자본주의 體制에 活力素를 불어넣어 주는 새로운 經濟法則이 아닐 수 없다. 資本과 技術의 장악은 分斷 극복의 주도권을 잡는 方案이 될 것이며, 더 큰 요인은 人間 중심의 福祉社會 건설로 사람이 싫어하지 않고 모여드는 곳이 되어야 할 일이다. \*